

2019 인구이야기



인구구조 변화와 개인 및 보험산업의 대응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

목차

1. (환경) 인구구조 변화
2. (영향) 사회경제적 변화 및 과제
3. (대응) 개인과 보험산업의 대응 방향

1. (환경) 인구구조 변화

1) 인구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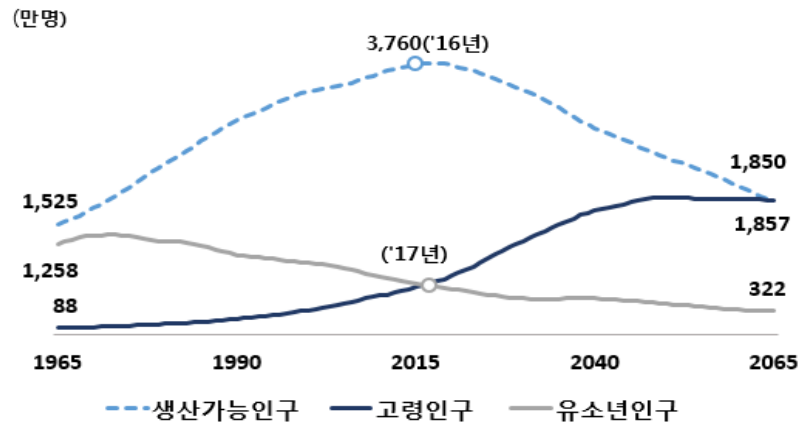
2) 고령화의 원인: 장수화, 저출산

1. 인구구조 변화

1) 인구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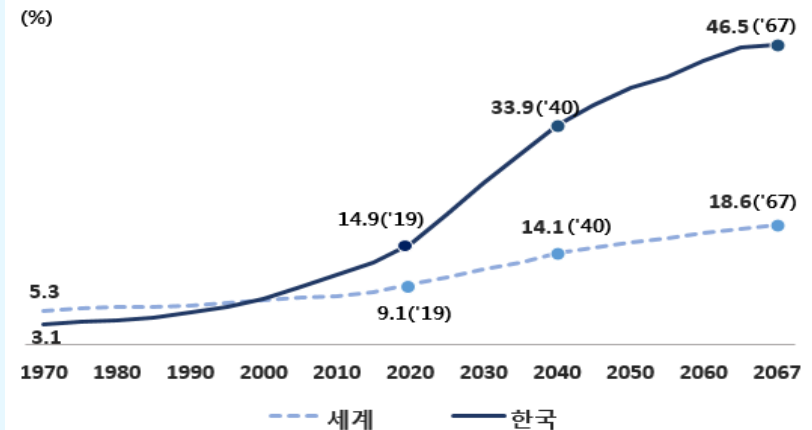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17년 8월 고령화율이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에 진입('18년 738만명, 14.3%)
 - 2017년에 고령인구는 유소년 인구를 초과, 생산연령인구는 감소 시작
-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00년 경에 세계 평균을 초과한 후 급속히 증가하여 격차가 확대
 - (우리나라) '19년 14.9% → '40년 33.9% → '67년 46.5% ('20년, 베이비부머 고령진입)
 - (세계) '19년 9.1% → '40년 14.1% → '67년 18.6%

연령계층별 인구 구조, 1965-2065년(중위)



자료: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2015년~2065년」, p9.

우리나라와 세계의 고령화율 비교



자료: 통계청(2019),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1. 인구구조 변화

2) 고령화의 원인: 장수화와 저출산

- (기대수명 증가)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2017년 82.7세, 20.4세 증가 (연 0.43세 증가)
 - 1970년~ 2014년 동안 고령층 기대여명의 증가는 65세 8.5세, 70세 6.9세, 80세 4.6세
- (후기고령자 증가) 고령층을 연령계층으로 구분할 경우 75세 이상 고령층의 급격한 증가 예상
 - 65세~69세, 70세~74세의 인구 비중은 감소하나, 75세 이상은 43.5%('19)→ 62.9%('60)

기대수명 및 고령자 기대여명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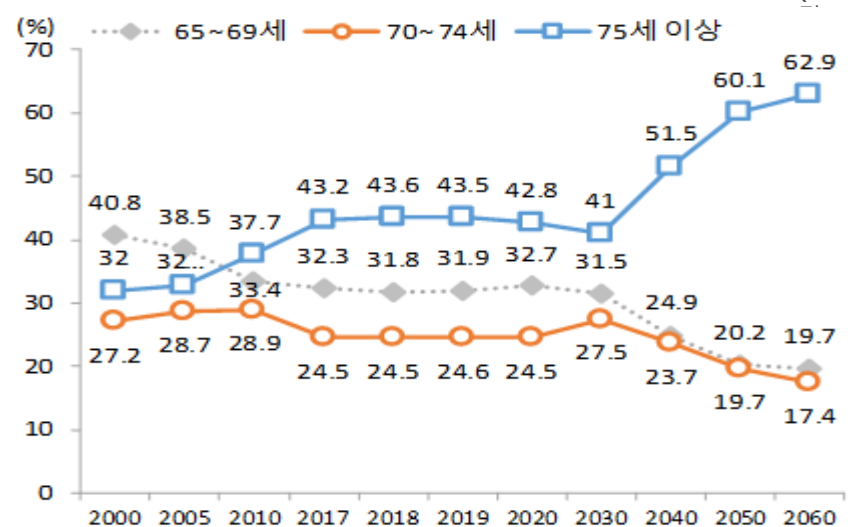
연도	0세(기대수명)	65세	70세	80세
1970	62.3	12.4	9.8	5.1
1980	66.2	12.9	10.1	5.3
1990	71.7	14.5	11.2	6
2000	76.0	16.6	13.1	7.4
2010	80.2	19.7	15.8	9.1
2015	82.1	20.9* (8.5)	16.7* (6.9)	9.7* (4.6)
2017	82.7 (20.4)			

주: *는 2014년 기준임. ()안은 1970년과의 차이

자료: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통계청(2018), 2017년 생명표

고령자의 연령별 구성비 (2000~206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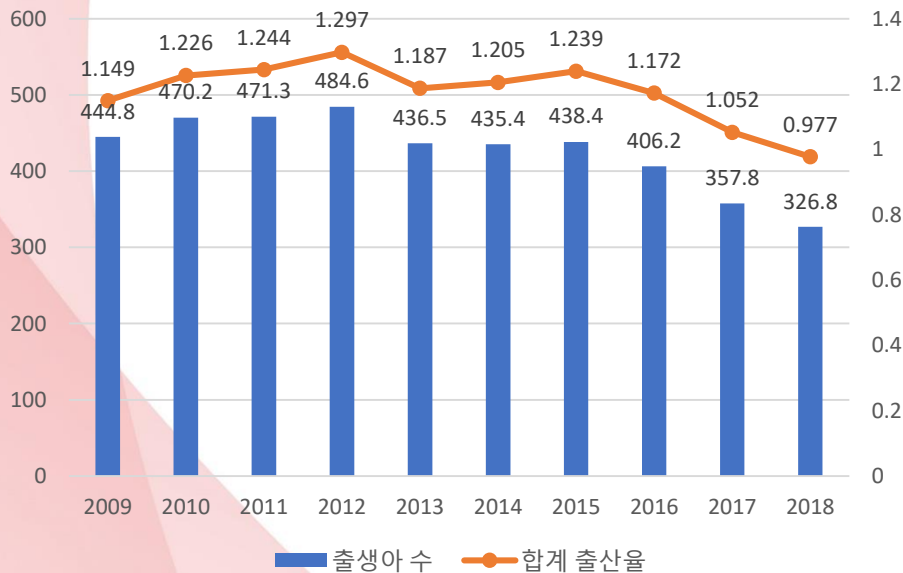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19), 2019년 고령자 통계

1. 인구구조 변화

2) 고령화의 원인: 장수화와 저출산

- (저출산) 우리나라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감소추세
 - 출생아 수는 2016년(40.6만 명) 이후 40만 명이하로 감소하여 2018년 32.7만 명
 - 합계출산률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0.98명 수준
- (최저출산 국가) 우리나라 합계출산률은 주요국에 비해 낮고, 2000년 전후로 국제수준보다 낮아진 후 지속
 - 1990년 이전인 1970년, 1980년대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주요 선진국의 2배 수준이었으나,
 - 2000년을 전후로 이러한 추이는 역전된 후 지속적으로 낮음 (추계는 다소 낙관적 전망으로 판단됨)

우리나라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률 추이



합계출산률 국제비교

(단위: 명)

국가별	1970	1990	2010	2020	2040	2060
한국	4.7	1.6	1.2	1.3 '18년(0.98)	1.6	1.7
중국	6.3	2.7	1.6	1.6	1.7	1.8
일본	2	1.7	1.3	1.5	1.7	1.7
캐나다	2.6	1.6	1.6	1.6	1.6	1.7
미국	2.5	1.9	2.1	1.9	1.9	1.9
프랑스	2.6	1.8	2	2	2	1.9
독일	2.4	1.4	1.4	1.5	1.6	1.7
스웨덴	2.2	1.9	1.9	1.9	1.9	1.9
영국	2.6	1.8	1.9	1.9	1.9	1.9

자료: kosis/합계출산율

2. (영향) 사회경제적 변화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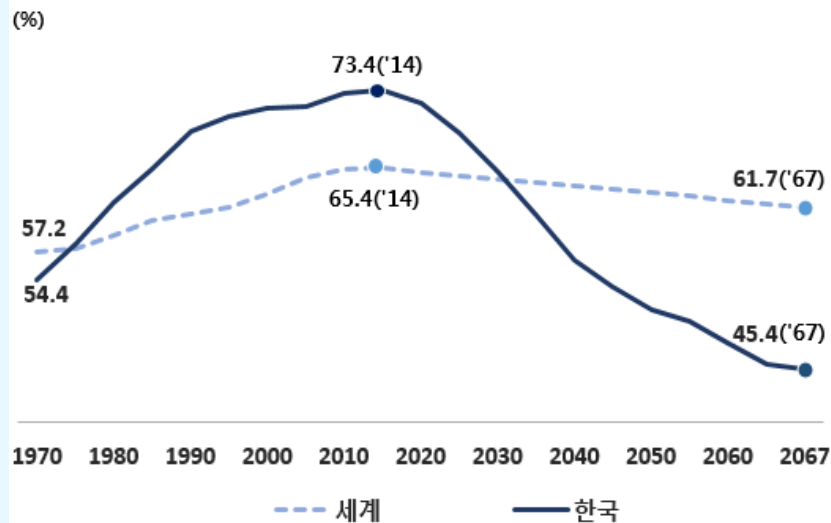
- 1) 고령화의 영향(산업) : 경기 침체 / 고령친화 산업의 성장
- 2) 고령화의 영향(가계): 소득감소, 노인빈곤 심화 / 건강 악화
- 3) 보험수요 및 공급의 현황/문제

2. (영향) 사회경제적 변화 및 과제

1) 고령화의 영향(산업1): 경기 침체

- (생산연령인구 감소)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14년 73.4%로 정점, '67년 45.4% (28%p 감소)
 - * '17년부터 생산연령인구 수 감소 (향후 연평균 30만 명 급감)
 - 세계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14년 65.4%, 완만하게 감소하여 '67년 61.7% (3.7%p 감소)
- (경기 침체)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함께 경제성장 등 경기변수는 지속적으로 둔화
 -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 9.0% → 2000년대 4.2% (4.8%p 감소)
 - 실질투자증가율은 동기간 14.0% → 2.6% (11.4%p 감소)

우리나라와 세계의 생산연령인구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2019),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생산연령인구와 경제변수 변화의 관계

구분	1971 ~1980	1981 ~1990	1991 ~2000	2001 ~2010
생산가능인구(15-64세) 증가율	3.1	2.3	1.3	0.7
경제성장률	9.0	9.7	6.5	4.2
실질투자 증가율	14.0	12.5	4.9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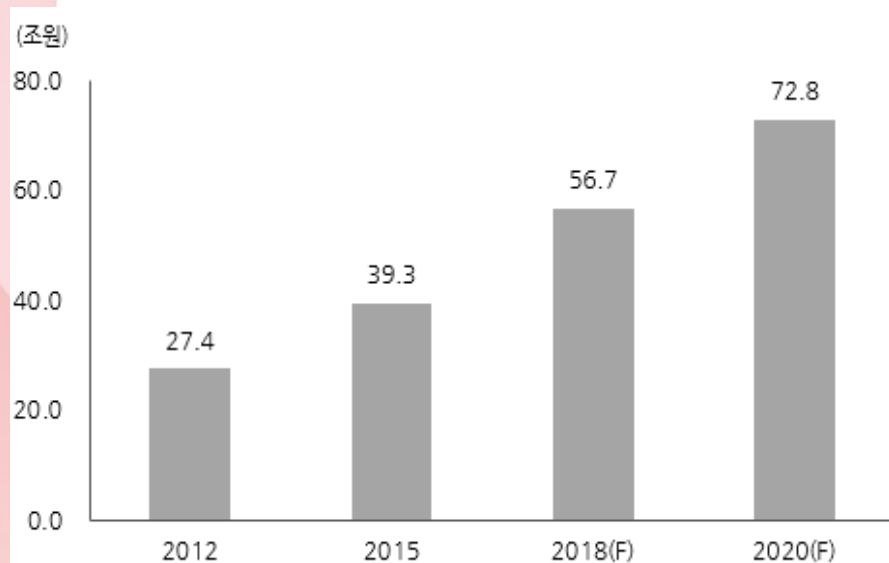
자료: 이진면 외(2012), 고령화를 고려한 중장기 산업구조 전망, 산업연구원

2. (영향) 사회경제적 변화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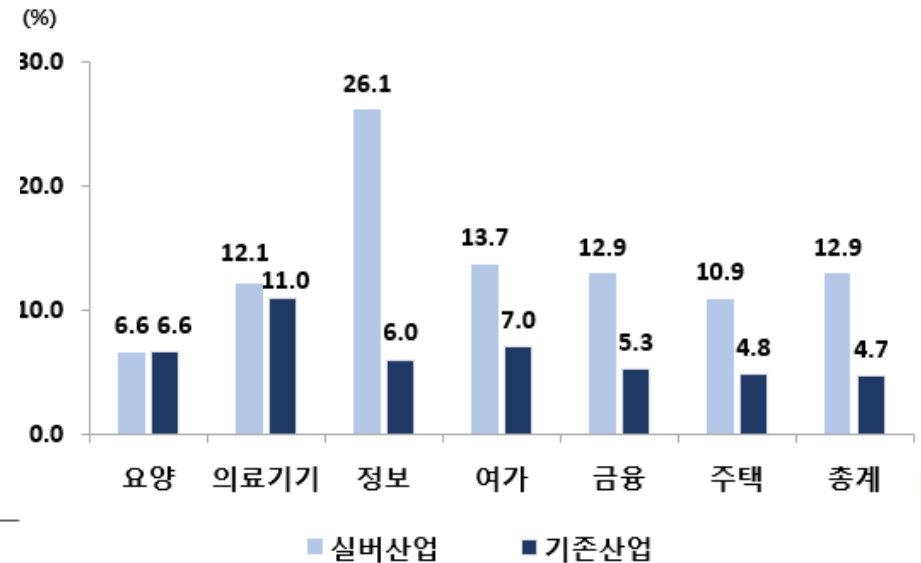
1) 고령화의 영향(산업2): 고령친화 산업의 성장

- (실버산업 성장) 고령친화시장 규모(금융업 제외)는 2012년 27조 4천억 원에서 2015년 39조 3천억 원으로 3년 동안 43% 증가 (보건복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3.1% 성장하여 2020년에 약 72조 8천억 원(GDP 대비 5.5%)에 달할 것으로 예상(KPMG(2017), p 11).
- 산업유형별로는 정보, 여가, 금융산업 순으로 성장률이 클 것으로 전망

고령친화산업 연평균 성장률 전망(2010~2020)



산업유형별 연평균 성장률 전망(2010~2020)



자료: KPMG(2017), 고령사회 진입과 시니어 비즈니스의 기회, Samjong Insight

자료: 장동구(2011), 고령화사회 진입이 금융시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 (영향) 사회경제적 변화 및 과제

2) 고령화의 영향(가계1): 소득감소, 노인빈곤 심화

- (소득절벽)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는 50대 가구주 가구 소득의 51.5%수준(3,758만원/7,292만원)으로 감소
 - 대부분 근로소득(50대 대비 31.4%), 사업소득(50대 대비 42.7%)의 감소에 기인
 - 60세 이상에서 공적 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연금 등)과 사적이전소득의 증가
- (노년부양비 증가)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인인구수)는 '18년 19.6명 ('60년 82.6명)
 -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00명 당 노인인구수)는 '18년 110.5명 ('60년 434.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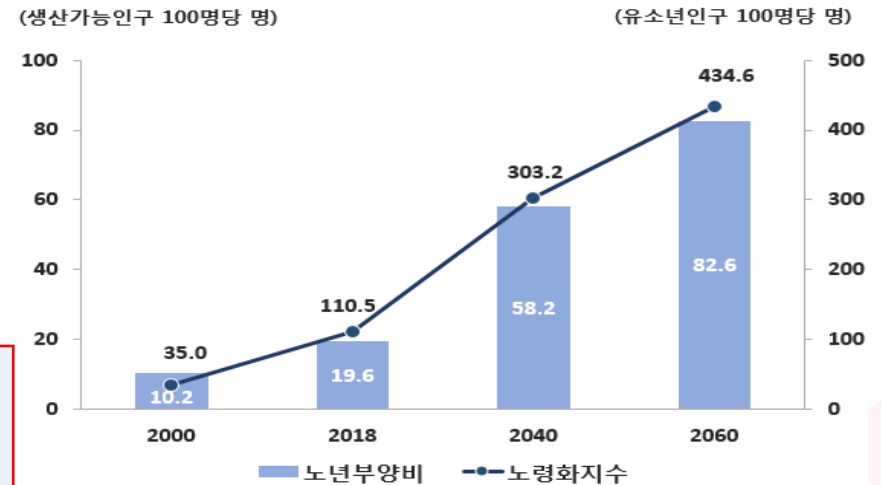
가구주 연령별 가구소득 구성

(단위: 만원)

가구주 연령대	가구소득 전체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전체	5,705	3,693	1,244	380	351	91
30세미만	3,533	3,022	275	39	82	116
30~39세	5,756	4,551	910	128	110	57
40~49세	7,107	5,003	1,664	290	115	35
50~59세	7,292	4,882	1,790	415	161	44
60세이상	3,758	1,533	765	533	753	175

자료: 통계청(2018),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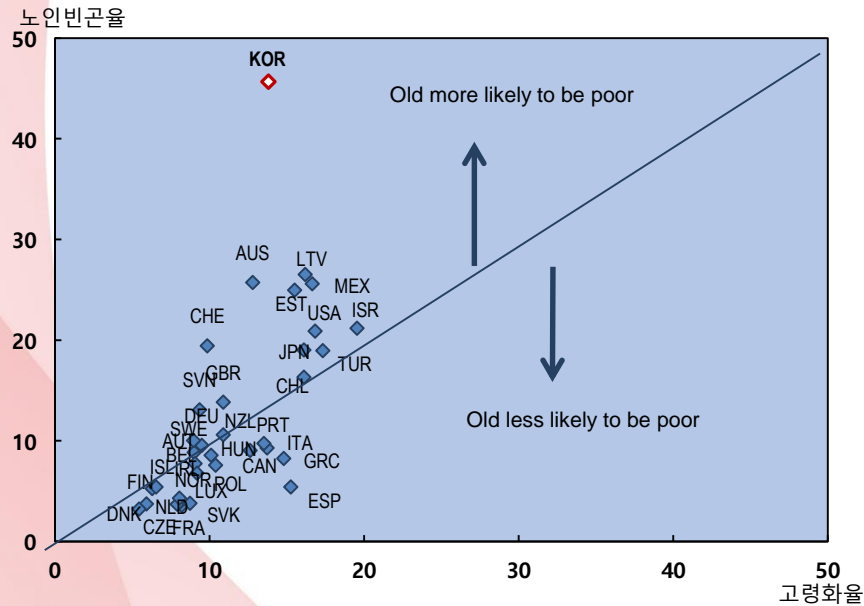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6), 「인구주택총조사」, 「장래인구추계」,

2. (영향) 사회경제적 변화 및 과제

2) 고령화의 영향(가계1): 소득감소, 노인빈곤 심화

- (선진국 대비 노인빈곤 최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인 45.7%('15)
 - 주요국의 노인빈곤율은 일본 19.0%, 영국 13.8%, 미국 20.9%, 독일 9.5% (OECD 12.5%)
- (노인빈곤 심화 지속) 2006년 이후 노인인구의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한 후 최근 정체
 - 지니계수 : 노인인구 불평등도는 2012년까지 증가, 2014년부터 완화(근로연령층 대비 상당히 높음)
 - 상대빈곤율 : 노인인구 빈곤율은 2014년까지 증가 후 2016년 다소 완화(근로연령층 대비 5배 이상)

고령화율 (X축) vs. 노인빈곤율 (Y축)



자료: OECD (2017) Pension at a glance

고령화율 (X축) vs. 노인빈곤율 (Y축)

연도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 단위:%)		
	계	근로연령 (18~65세)	노인인구 (65세 이상)	계 ¹⁾	근로연령 (18~65세)	노인인구 (65세 이상)
2006	0.306	0.295	0.390	14.3	11.1	42.8
2008	0.314	0.300	0.403	15.2	11.5	44.1
2010	0.310	0.297	0.411	14.9	11.3	46.3
2012	0.307	0.287	0.433	14.6	10.0	47.2
2014	0.302	0.281	0.396	14.4	9.3	47.4
2016	0.304	0.279	0.390	14.7	9.0	46.5

주: 1) 가계동향 : 전체가구(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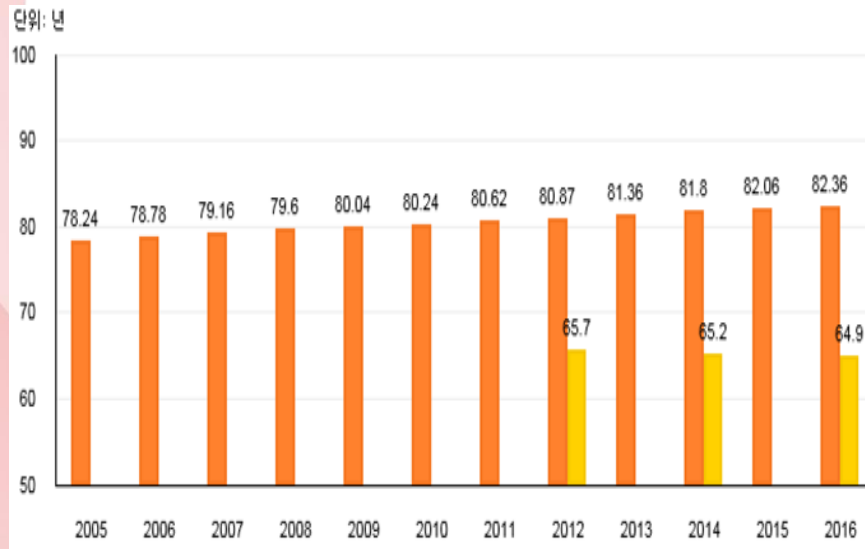
자료: KOSIS, 소득분배지표;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지표/상대빈곤율

2. (영향) 사회경제적 변화 및 과제

2) 고령화의 영향(가계2): 유병 장수, 의료/요양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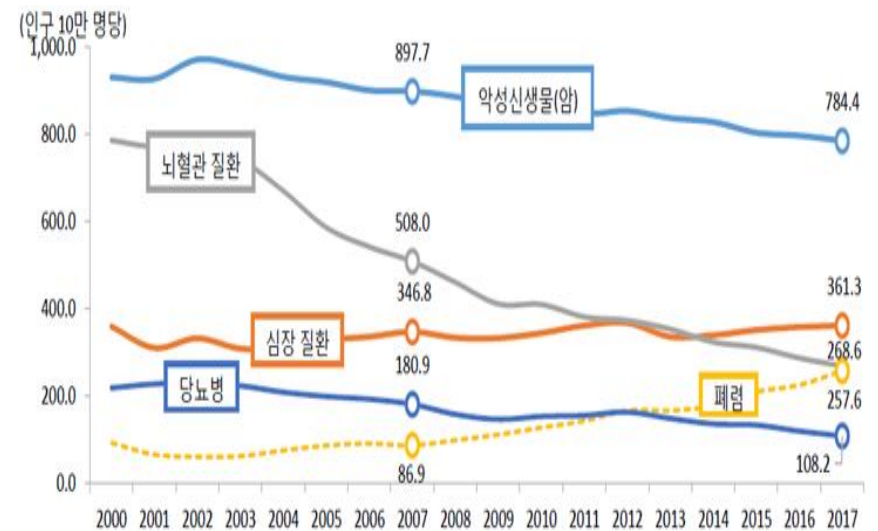
- (건강수명 감소) 2012년 이후 건강수명이 오히려 감소('12년 65.7세 → '14년 65.2세 → '16년 64.9세)
 -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건강수명의 감소는 유병기간의 증가를 의미 (동기간 15.2년 → 16.6년 → 17.5년 증가)
- * (유병장수) 60세 이상 자의 67%가 만성질환보유(60대 60.7%, 70대 74.2%, 80세 이상 76.54%)
- (암사망 가장 많음) 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인구 10만 명당 784.4명이 사망하였고, 그 다음은 심장 질환(361.3명), 뇌혈관 질환(268.6명)
 - 악성신생물(암), 뇌혈관 질환 사망률은 점차 감소하나, 폐렴, 심장 질환 사망률은 증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추이



자료: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58

고령층의 5대 사망원인 사망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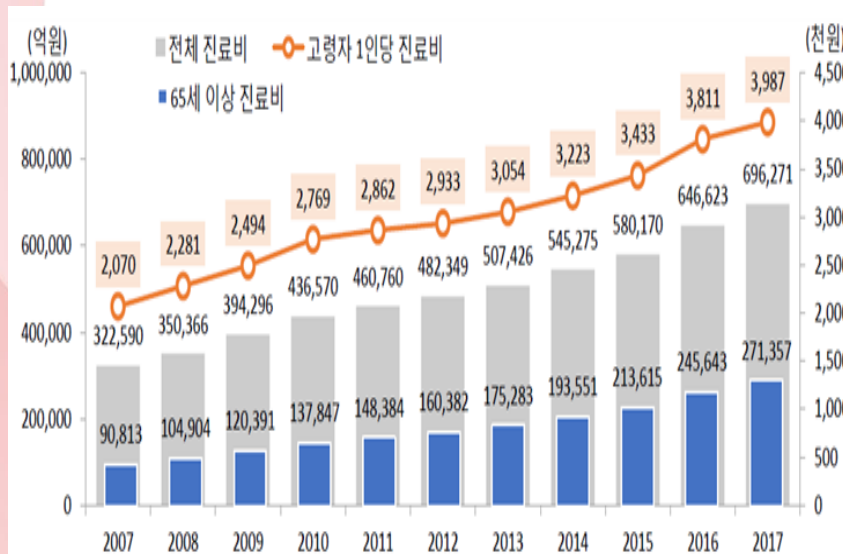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2019), 2018년 고령자통계

2. (영향) 사회경제적 변화 및 과제

2) 고령화의 영향(가계2): 유병 장수, 의료/요양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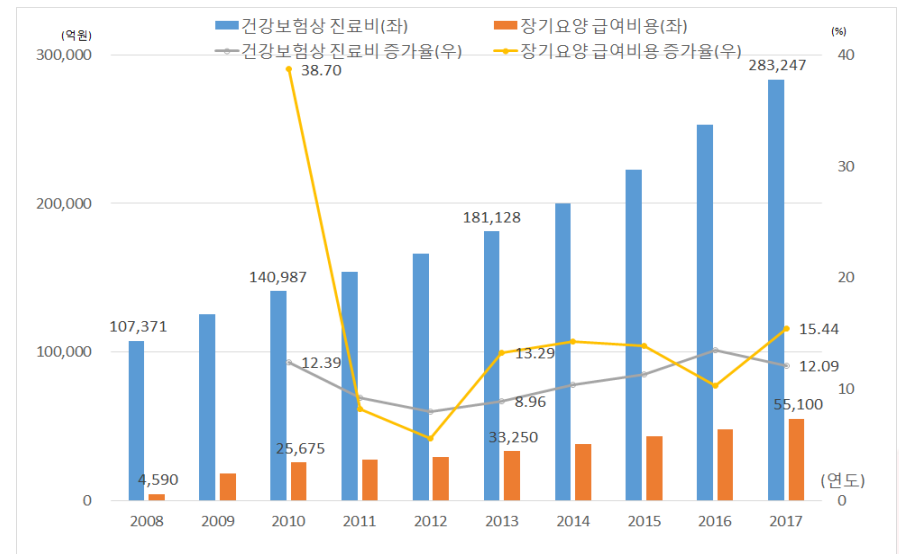
- (노인 진료비 급증) 2017년 건강보험 상 전체 진료비는 69조 6,271억 원이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는 전체의 39.0%인 27조1,357억 원으로 전년보다 10.5% 증가
 - 65세 이상 1인당 진료비는 398만7천원으로 전년(381만1천원)보다 4.6%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 추세
- (요양비 급증) 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요양보험상 요양비는 5조 5,100억 원 (진료비 1/5배)
 - 연평균 증가율(2010년~2017년)을 보면 요양비가 15.0%여서 진료비 10.7%에 비해 약 4.3%p 높음

건강보험 상 의료비(진료비) 추이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통계청 (2019), 2018년 고령자통계

건강보험 진료비 및 요양보험 급여비 추이



자료: 국민건강보험(2017);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년도

2. (영향) 사회경제적 변화 및 과제

3) 보험시장의 현실: 수요자의 현황/문제

낮은 소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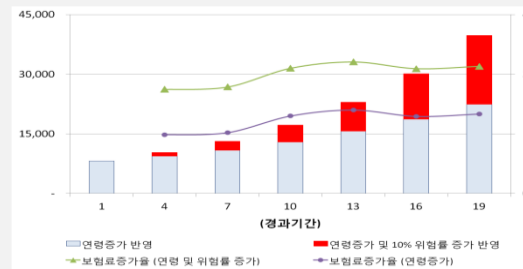
소득불안정, 공적연금 급여축소
낮은 노후 소득

- 65세 이상 자의 경제활동 참여율 68.0%(OECD 62.1%, '16년 기준)
- 66세 이상 소득자의 월평균 소득은 154만원('17년): 전체 평균의 53.7%
- 60세이상 가구의 가처분소득(월 246만원, 16년): 전체 가구의 68.5%수준

높은 보험료 부담

갱신형 보험상품의 보험료 부담
→ 저조한 가입률

경과기간별 실손의료비 갱신보험료



자료: 금융감독원(2010)

고령층의 금융이해력 부족

고령층의 제한적 금융지식 → 가입저조 or 소비자 피해 발생

연령별 성인의 금융이해력 수준

연령	금융지식	금융행위
20대	69	58.4
30대	68.2	64.8
40대	68.2	62.2
50대	66.5	60.6
60대	61.6	56.0
70대	50.2	52.3

자료: 한국은행·금융감독원(2019)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상품 미가입 원인

원인	(복수)응답비율	원인	(복수)응답비율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75.1%	공적 사회보장 기대	9.2%
보험기간이 길어서	27.0%	다른 투자나 저축이 유리	8.6%

자료 : 생명보험협회(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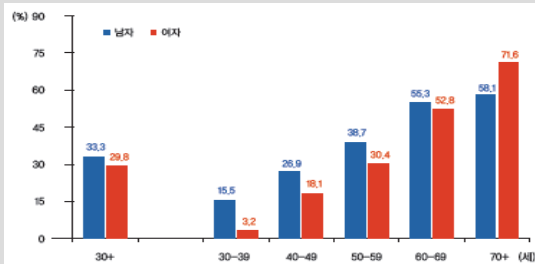
2. (영향) 사회경제적 변화 및 과제

3) 보험시장의 현실: 공급자의 현황/문제

보험상품에 대한 위험관리

- 고령층에 대한 위험률 측정의 어려움: 고령층질병발생을 변화, 기대수명예측의 어려움

연령별 질병(고혈압) 유병률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통계

사망률 개선을 비교

연령	4회 경험 생명표	실제 개선을	7회 경험 생명표	실제 개선을
65~69세	2.01	4.51	3.59	4.87
70~74세	1.93	3.70	3.07	3.33
75~79세	1.93	2.82	2.59	2.87

자료: 김세중(2014)

제한적인 상품공급

-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지 못한 보험상품

국내 고령자 전용보험상품 현황

- 건강보험(암보험)을 중심으로 개발
- 상조보험, 간병보험 등을 통한 현물서비스 공급은 제한적

국내생명보험사 연금상품개발현황

연령	용량	구분	용량
일시납즉시	19.0%	확정종신	9.5%
변액연금(종신)	17.4%	고연령거치	4.7%
변액연금(유기)	38.1%	자산연계형	4.7%

자료: 이봉주(2012)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보험의 역할과 과제

법적 제도적 지원 미흡

- 연금가입 유인 제공을 위한 적정 세제혜택 미흡
- 위험률 할증 현실적 제한

* (15년)30% → (16년)50% → (17년)폐지

위험률
할증폭

할증폭의 현실적 제한
→ 상품공급유인 저해

세제혜택
방식전환

“소득공제 → 세액공제”
개인연금 세제혜택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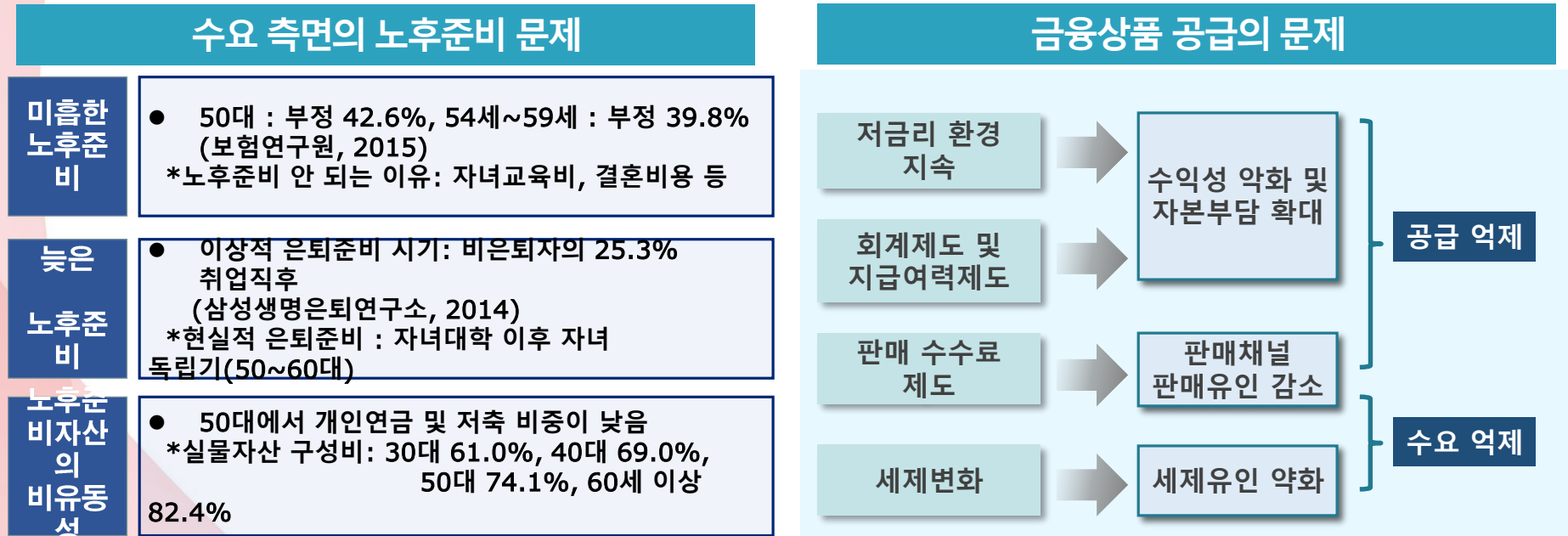
세제혜택
효과

“일시금수령 vs. 연금수령”

2. (영향) 사회경제적 변화 및 과제

3) 보험시장의 현실: 보험시장 형성의 어려움

- (수요 측면) 노후준비가 미흡하고, 늦게 노후를 준비하게 되는 문제로 나타남
 - 노후준비가 된 경우에도 부동산 중심의 비유동성 자산에 의존
- (공급 측면)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수수료 제도 및 세제 변화,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 등의 제도환경적 요인들이 공급 유인을 억제함
 - 공급측면에서는 수익성 악화, 자본부담 확대, 판매채널 판매유인 감소 등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함
- (시장형성 어려움) 개인의 노후 준비 행태와 경제환경 변화로 수요 및 공급 유인이 왜곡되어 시장실패에 직면한 상황



3. (대응) 개인과 보험산업의 대응 방향

- 1) 시장환경 개선 및 수요 욕구 반영
- 2) 개인의 대응 방향 (가계)
- 3) 보험산업의 대응 방향 (산업)
- 4) 소비자, 산업, 정부의 협력적 대응 필요

3. (대응) 개인과 보험산업의 대응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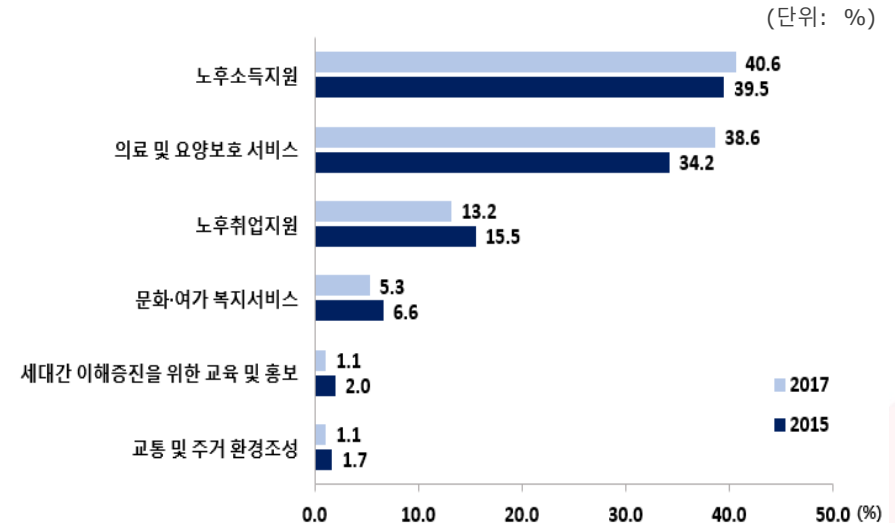
1) 시장환경 개선 및 수요 욕구 반영

- (보험시장 환경 개선) 고령화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문에 대한 정책적 개입 필요
 -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퇴직자 노후생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의 수급 불일치 현상을 해소할 필요
- (사회적 관심) 부족한 노후준비를 충당하는 수단으로 소득과 의료/요양형태의 지원을 원함 (2017년)
 - 노후소득지원에 대한 관심은 40.6%,
 - 의료 및 요양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38.6%

보험시장 환경 개선

- (수요: 개인) 노후준비 미흡하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여 추가적 보험상품 구입이 어려움
- (공급: 산업) 고령화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공급 유인이 떨어진 상황
- (정부) 수요 및 공급 부문의 엇박자로 시장형성이 되지 않는 시장실패 상황이므로 정책지원을 통한 환경 개선 필요

노후를 위한 사회적 관심사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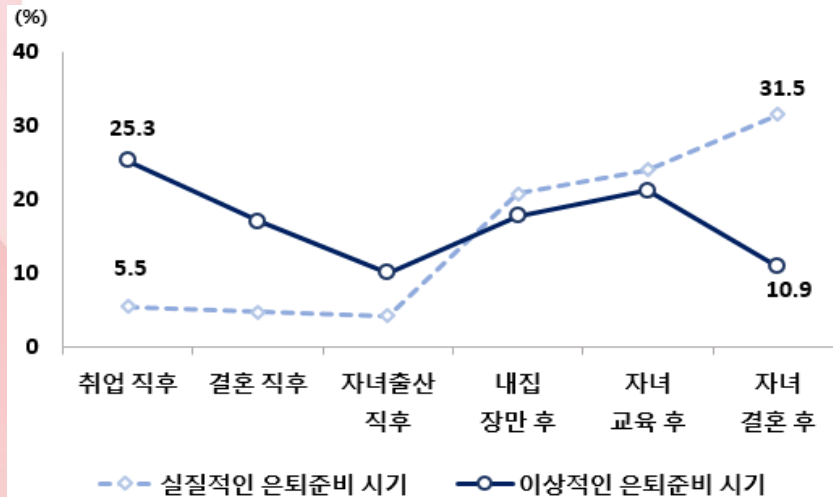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8), 사회조사 결과

3. (대응) 개인과 보험산업의 대응 방향

2) 개인의 대응 방향 : 소득보장 및 건강보장

- (노후준비 조기화) 노후준비가 늦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조기에 노후준비가 되도록 설계할 필요
 - 노후소득의 적정시기는 취업 직후이나 현실과 괴리 존재
 - * 이상적 은퇴준비 시점은 20~30대, 현실적 은퇴준비시점은 퇴직 전후 시점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14)
- (연금소득 추가 확보) 지속적으로 소득흐름이 보장되는 연금소득으로 준비할 필요
 - (연금소득 선호) 은퇴 후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후생활수단으로 연금소득을 선호함
 - * 공적연금(41.3%)과 사적연금(21.3%)을 다른 소득원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함
 - (사적연금 추가 확보) 공적연금은 재정문제로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퇴직/개인연금 통한 추가확보 필요
 - * 적정노후소득을 소득대체율 70%로 가정(OECD)하면, 평균적으로 공적연금 30~35%(기초연금 포함), 퇴직연금 13%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면, 22~27%의 추가적 확보 필요 (역모기지 활용도 필요)

은퇴준비 시기, 이상과 현실의 괴리



자료: 삼성생명 은퇴연구소(2014),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4』, 은퇴백서.

은퇴 후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후생활수단(1순위)

(단위: %)

구분	공적 연금	개인 연금	퇴직 (연금)	사적 연금	일반 저축	부동산 관련소득
전체	41.3	13.2	8.1	(21.3)	20.3	11.4
20대	44.3	9.4	11.7	(21.1)	26	6.8
30대	44.5	11.6	8.7	(20.3)	17.8	11.5
40대	41.6	10.2	9.3	(19.5)	22.3	11.8
50대	44.7	11.7	6.8	(18.5)	15.5	14
60세 이상	32.1	22.5	4.7	(27.2)	20.6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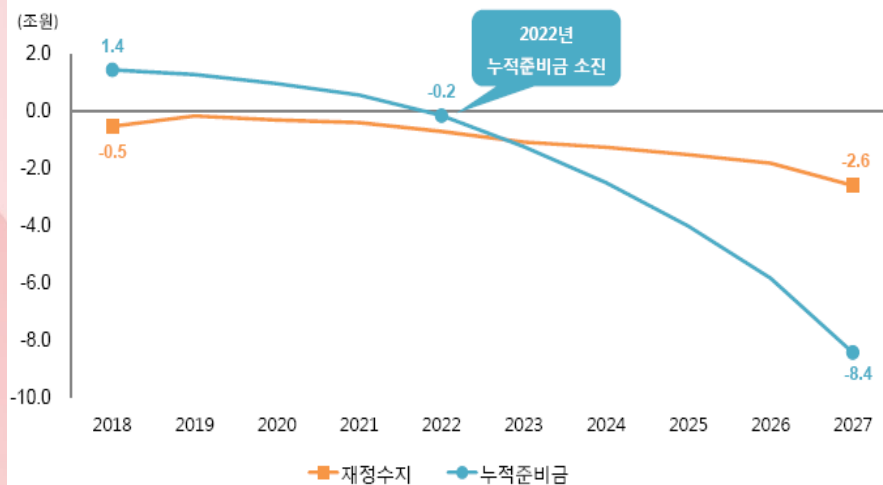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6), 고령화와 노후준비

3. (대응) 개인과 보험산업의 대응 방향

2) 개인의 대응 방향 : 소득보장 및 건강보장

- (간병비의 추가 확보) 치매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료비 외에 추가적으로 간병비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의 급증으로 현재 2050년 경에는 현재의 4배에 해당하는 치매 노인이 발생
 - * 2018년 치매노인 75만명이나 2050년 303만명으로 추정
- (민영 간병보험 준비 필요) 공적 부문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상황이 낙관적이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민영 간병보험 준비를 통해 대응해 갈 필요가 있음.
 -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2022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전망(2018~202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8),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 및 유병률 전망

구분	2018	2019	2020	2030	2040	2050
65세이상	7,381	7,694	8,134	12,955	17,120	18,813
치매노인인구	749	791	837	1,368	2,177	3,027
치매유병률	(10.1)	(10.3)	(10.3)	(10.6)	(12.7)	(16.1)
치매인구 증가 규모 ¹⁾	1.0배	1.1배	1.1배	1.8배	2.9배	4.0배

주: 1) 2018년 대비 해당 연도의 치매노인인구 수 배율
 자료: 「2016년 치매역학조사」(중앙치매센터 2018년), 「2015년 인구센서스」; 보건복지부, 2019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3. (대응) 개인과 보험산업의 대응 방향

3) 보험산업의 대응 방향

- (환경변화 적극 대응) 국제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
- 개인연금 등 저축성보험에 적용되는 최저보증이율을 저금리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 조정을 통해 자본 부담을 완화해 나갈 필요 있음 (관련 규제에 대한 검토 필요)
- * Solvency II 시행 이후 유럽 보험회사들은 금리리스크가 큰 저축성보험 상품 공급을 줄이고 변액보험 등 투자형 상품 및 하이브리드형 보장성상품을 강화
- 한편, 높은 예정이율을 지급하는 종신보험, 위험률 측정이 어려운 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에서 과잉경쟁이 초래되어 산업환경이 왜곡되지 않도록 대응 필요

종신보험 경쟁 심화

- 최근 장기유지 시 환급률이 높은 무(저)해지환급금 보장성보험 판매 증가
-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이 2.5% 정도로 저축성보험 최저보증이율 1% 수준에 비해 높음
- 종신보험 경쟁심화과정에서 고이율 보장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가능

건강보험 경쟁 심화

- 초간편보험, 새로운 암보험, 치매보험 등 건강보험 신상품 판매 확대
- 언더라이팅 간소화, 보장 강화 경쟁 심화
- 무리한 보장성보험 확대 전략이 향후 손해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3. (대응) 개인과 보험산업의 대응 방향

3) 보험산업의 대응 방향

- (체계적 손익관리) 연령별/담보별/가입금액별 리스크 분석 및 관리
 - 고령층대상 보험상품의 경우 위험예측이 어려워 판매 후 쉽게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가입연령대별, 담보위험별, 보장금액 수준별로 세분화하여 리스크를 분석하고 조정할 필요
- (통계집적 및 정보공유) 관련 통계(질병, 기대수명 등) 및 정보의 집적 및 공유 시스템 구축
 - 개별 보험사별 보유 통계의 원활한 교류 및 통계집적 필요
 - 보험회사별 고령층에 대한 부족한 경험실적을 극복하기 위한 정보공유 체계구축 필요
- 보험산업의 대응 전략은 기존 상품에 대한 내실화와 신규사업 발굴로 요약됨
 - 소득분야로 공사연계연금 도입 등 사적연금 내실화와 활성화
 - 건강분야로 맞춤형 건강보험 상품 공급 및 간병시장 확대에 대응

소득분야 보험시장 대응

(1) 사적연금 내실화 제고 : 위험관리, 상품다양화

- 공사연금 연계강화 & 연금수령 의무강화
 - 공적연금 가입 전제(보조금 및 세제지원) => 공사연계연금 (리스터 연금)
-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
 - 일정소득 이상 자에 대해 다양한 인출 허용(영국의 Drawdown Pension)
 - * 체증형·체감형, 프로그램인출방식, 월지급식펀드 등
- 건강 및 장수리스크 관련 연금상품 개발
 - 비표준형 연금, 고연령거치연금 개발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

(2) 노후설계 등 신규사업 추진

- 퇴직전 근로자 대상으로 노후설계 및 교육 강화

건강분야 보험시장 대응

(1) 건강보험 내실화 제고

- (가입자특성 및 위험군별) 맞춤형 보험상품 공급
 - 고령특화상품 : 저보험료(보장성 강화), 유병자보험, 종신보장형 강화
 - > (전제) 통계지원 및 위험보장 고려, 고령특화 판매채널 검토 필요

(2) 간병시장 확대에 대응한 산업전략 모색

- 요양서비스 직접 참여의 가능성에 대한 적극 검토
- 요양시설(예, 위례빌리지 사례)을 플랫폼 기반으로 보험산업 및 보험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장기적 보험산업 발전 전략 모색
- 기업성부모간병보험, 치매가족휴가보험(가칭) 을 단체 혹은 개인보험으로 개발

3. (대응) 개인과 보험산업의 대응 방향

4) 소비자, 산업, 정부의 협력적 대응 필요

- (인식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개인, 기업, 정부 모두 고령사회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는 인식 필요
 - 수요자(소비자) :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노후에 대비하여 충분한 소득, 건강보장 준비를 수행할 필요
 - 공급자(보험사, 정부) : 보험산업이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한 산업임을 인식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보험상품의 공급이 필요
고령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고,
국가는 고령화 극복의 최종적 책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함
- (공사협력강화) 사회보험과 사적보험간의 연계강화를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극복할 필요
 - 정부 : 공사역할 분담의 청사진 제시하고, 민영보험의 공공적 역할에 대해 정책적 지원 필요
(또한 시장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도 필요)
 - 보험회사 : 실제로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발굴하고,
유지율 제고를 통해 보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생애기간동안 관리 서비스 제공)
다양한 고령친화형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급할 필요